

윤석열 정부 1년, 남북교류협력 과제

이해경 |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 | hjlee@hri.co.kr

I. 머리말

최근 국제사회의 경제성장에 대한 주요 화두는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의 ‘이중 전환’이라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가 및 지역 간 불균형도 중요한 이슈로 인식되고 있다(UNESCO, 2021, p.31).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의 ‘이중 전환’ 문제는 경제성장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담보하기 위한 필수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개도국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 간 격차 문제는 농촌과 지방에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면서 경제적·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김정은 시기 북한 역시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고민에 공감하고 나름대로의 정책을 수립하며 대응해 나가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초기부터 ‘과학기술 중시 정책’을 펼치며 ‘지식경제’를 언급하면서 지식과 경제,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접히 결합시킬 것을 강조해 왔다. ‘녹색 전환’과 관련해서도 2015년부터 국제사회가 추진 중인 국제연합(UN)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이행에 동참하며, 경제-사회-환경의 선순환적인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인민생활 향상’을 목표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5월 취임사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경제와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8.15 경축사를 통해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였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악화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간 상호 불신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보건 위기 등 글로벌 환경 변화와 북핵문제로 인한 대북제재 등 국제 정세, 국익 실현,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남북교류협력을 재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고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 과제를 구체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북한의 인민생활 향상에 대한 고민과 수요를 고려하여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 과제는 무엇인지를 살피고자 한다.

II. 북한의 협력 수요 검토¹⁾

1. 북한의 과학기술 중시 정책

김정은 시대 북한은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발전을 모색하며 경제와 과학기술 간 연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정은 시대 북한의 과학기술 정책은 이전 시대의 정책방향을 계승하면서도 글로벌 과학기술 변화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이를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삼고자 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2년 4월에 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에서 ‘새 세기 산업 혁명을 통한 경제 강국 건설’을 당면한 핵심과업으로 제기하였다.²⁾ 또한 2013년 11월에 전국과학기술자대회를 개최해 ‘지식경제로의 전환’과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강조하였다.³⁾ 특히 2016년 5월에 제7차 당대회를 통해 ‘과학기술강국’ 건설 구상을 제시하면서 과학기술의 주도로 경제, 국방, 문화 등 모든 부문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주문하였다.⁴⁾ 2021년 1월의 제8차 당대회에서도 과학기술 발전이 사회주의 건설과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2021~2025)’의 견인차가 되어야 함을 역설하면서 과학기술 발전은 사회주의 건설과 5개년 계획의 성공을 위한 ‘중핵적인 과제, 최선의 방략’이라고 강조하였다.⁵⁾

1) 본 장은 강성현·이해정,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남북경협의 발전적 재개 방안」, 『채어퍼슨노트』, 22-02, 2022. 3. 3(비공개보고서)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2) 『노동신문』,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 혁명 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 2012. 4.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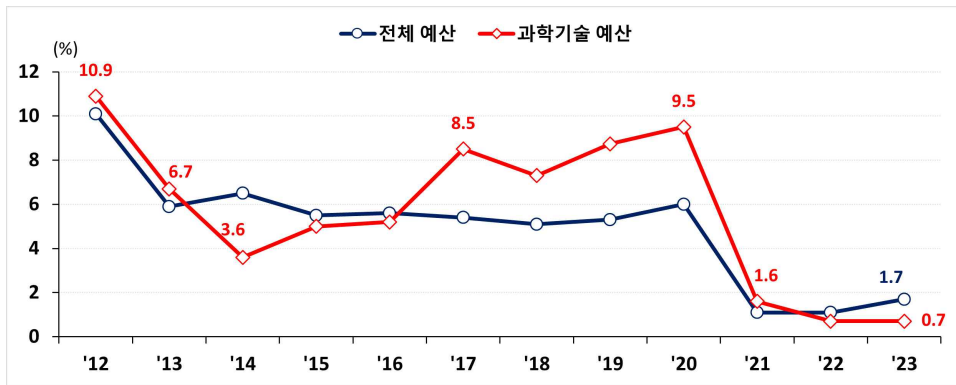
3) 『노동신문』, 「전국의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2013. 11. 14.

4) 『노동신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2016. 5. 8.

5) 『노동신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4일회의 진행」, 2021. 1. 9.

이러한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은 국가예산에도 반영되고 있다. 2012~23년간 북한의 과학기술 관련 예산지출계획의 연평균 증가율은 5.2%로, 동 기간 전체 예산지출계획 연평균 증가율 4.5%를 상회하였다. 또한 2020년에 북한이 UN에 제출한 자발적국별리뷰(Voluntary National Review: VNR)에 따르면 정부 지출 중 R&D 비율은 2015년 8.8%에서 2020년 9.9%로 늘었으며, GDP 대비 R&D 지출 비율은 동 기간 8.2%에서 9.6%로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다(DPRK. 2021, pp.59~61).

[그림 1] 북한의 국가예산지출계획 증가율(전년 대비)



자료: 『노동신문』(각년도 최고인민회의 발표 내용)을 토대로 작성.

한편, 김정은 시기 북한은 과학기술 관련 법제 정비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다. 「사회주의헌법」 제27조에서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며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자원이다. 국가는 모든 경제활동에서 과학기술의 주도적 역할을 높이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일체화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제40조 및 제46조에서 ‘전민과학기술인재화’ 및 ‘과학기술인재’ 육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1988년에 제정된 「과학기술법」을 김정은 시기 들어 두 차례 개정하였으며, 동 법 제7조에서는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과학기술과 경제의 결합 원칙을 규정하고, 제8조에서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실현 원칙을 명시하였다. 2020년 12월에는 과학기술성고가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며, 과학기술과 경제의 일체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과학기술성과도입법」을 신규 제정하였다. 또한 2020년 4월에 전민과학기술인재화 및 인재강국화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원격교육법」을 신규 제정하였다. 북한에서는 2010년 9월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시작으로, 2015년 4월 김일성종합대학, 원산경제대학 등으로 원격교육이 확대되었으며, 코로나19를 계기로

더욱 확산되어 대학 교육을 넘어 소학교와 중고등학교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원격교육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양문수·이춘근·이석기, 2021, pp.61~64). 최근 보도에 따르면 평양제4소학교에서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기기를 활용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 정보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⁶⁾ 이와 함께 휴대전화를 활용한 원격학습의 대중화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⁷⁾ 이에 북한은 이동통신을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정보화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 및 기술인재양성 원칙을 담은 「이동통신법」을 2020년 12월 신규 채택하였다. 나아가 지난 4월 북한은 과학기술인재들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관리를 실현하고, 그들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과학기술인재관리법」을 제정하였다.⁸⁾

북한은 코로나19로 대면회의가 어려워지면서 자체 개발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락원’을 활용해 김정은 위원장 주재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소학교 입학식을 화상으로 진행하는 한편,⁹⁾ 러시아와 정부 간 위원회 화상회의를 열고,¹⁰⁾ 북중간 온라인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화상회의를 폭넓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¹¹⁾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결국 취소되었으나, 2021 평양마라톤대회를 비대면 가상 형식으로 진행하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¹²⁾

2. 북한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모색

북한은 UN의 SDGs에 관심을 가지고 자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이행 중에 있다. 김정은 정권은 지속되는 자연재해를 체제와 경제의 위협요인으로 인식하고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에 관심을 쏟고 있다. 북한은 2013년 「산림건설총계획(2013-2042)」을 수립하여 2014년부터 산림복구전투를 강조하는 등 산림녹화 사업을 실시하였다(최현아, 2018, pp.5~6).

6) 『연합뉴스』, 『조선일보』, 「북한 초등학교, VR·AR 기기까지 교육에 활용」, 2021. 8. 17(<https://www.yna.co.kr/view/AKR20210817081800504?input=1195m>, 검색일: 2023. 5. 9).

7) 북한 주간지 교육신문은 ‘손전화기에 의한 이동 원격학습체계의 특징’이라는 글에서 “손전화기 이동학습체계를 개발하는 것은 원격교육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강조. 국민일보, “북한도 스마트폰 앱 원격학습 대중화(2015. 2. 15)”<<http://news.kmb.co.kr/article/view.asp?arcid=0009147639>, 검색일: 2023. 5. 9).

8) 『연합뉴스』, 「북 “우리 인재로 자립경제 토대 강화”...과학기술인재관리법 소개」, 2023. 5. 13(<https://www.yna.co.kr/view/AKR20230513009100504?section=nk/news/all>, 검색일: 2023. 5. 15).

9) 『연합뉴스』, 「코로나로 ‘북한판 줌’도 활발...김정은 주재 화상회의서도 사용」, 2021. 5. 15. (<https://www.yna.co.kr/view/AKR20210515027400504>, 검색일: 2023. 5. 12).

10) 『한국무역협회』, 「코로나로 국경 닫은 북한, 러 극동 교류·협력 재개 모색」, 2022. 6. 20.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Siteid=1&nIndex=%2068975>, 검색일: 2023. 5. 12).

11) 『KOTRA』, 「2022년 북-중 온라인 전시회 개최, 무역 물고 트릴 전망」, 2022. 3. 28(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onKotraBoardDetail.do?pageNo=1&pagePerCnt=10&SITE_NO=3&MENU_ID=520&CONTENTS_NO=1&bbsGbn=247&bbsSn=247&pNttSn=193758&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pNatCd=&pKbcCd=&pIndustCd=&sSearchVal=, 검색일: 2023. 5. 12).

12) 『연합뉴스』, 「북한, 비대면 진행하려던 평양마라톤대회 결국 취소」, 2021. 3. 6(<https://www.yna.co.kr/view/AKR20210306025000504>, 검색일: 2023. 5. 12).

또한 「국가환경보호전략(2019-2030)」을 수립하여 “생태환경을 회복단계로 올려세우며 녹색 경제로 이행할 수 있는 물질기술적 토대”를 갖추겠다는 계획을 밝혔다.¹³⁾ 한편, 북한은 2016년 8월 파리협정을 비준하고, “2030년까지 자체의 노력으로 온실가스 방출량을 16.4% 감축하며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에 의한 국제적 협조가 추진되는 데 따라 36% 더 줄일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¹⁴⁾ 북한은 자발적국별리뷰(VNR)를 통해 산업 폐기물·생활 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을 장려하고 있으며, 2020년에 이와 관련하여 「재자원화법」도 제정하였으나 자국의 재활용 수준은 여전히 낮다고 밝히고 있다(DPRK, 2021, p.8).

북한은 「사회주의헌법」 제57조에서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노동조건을 마련하여준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1986년에 제정된 「환경보호법」을 김정은 시기에 네 차례 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의 결합 원칙을 규정하면서 “환경보호는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중요한 요구이며, 국가는 환경보호와 경제 발전을 결합시키고 환경보호에 유리한 경제정책을 취하며 환경보호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북한은 2012년에 「대기오염방지법」, 2013년에 「재생에너지를 법」, 2015년에 「독성물질취급법」, 2020년에 「재자원화법」, 2021년에 「보통강오염방지법」을 신규 제정하였으며, 1992년에 제정한 「산림법」과 1997년에 제정한 「바다오염방지법」, 2008년에 제정한 「대동강오염방지법」을 각각 세 차례 개정하였다.

한편, 북한은 2014년에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을 제정하고, 세 차례 개정하였다. 동 법은 재해를 “큰물, 폭우, 가물, 태풍, 해일, 지진, 화산 등 재해성자연현상이나 그밖의 요인으로부터 인민의 생명안전과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국민의 재산에 끼치는 엄중한 피해”라고 정의하고 있다. 북한은 자발적국별리뷰(VNR)를 통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심각한 자연재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기후 관련 자연재해 대응을 위해 산림건설녹화사업을 실시하고, 당국의 잠재력을 높이는 한편,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DPRK, 2021, p.15). 또한 북한은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1997년에 제정한 「전염병예방법」을 김정은 시기에 5차례 개정하고, 2020년에 「비상방역법」을 제정하여 세 차례 개정하였다. 북한의 자발적국별리뷰(VNR)에서도 세계적 보건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위생 및 방역 부문의 토대를 완성하고 비상방역체계를 강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DPRK, 2021, p.21).

13) 『조선중앙통신』, 「2019년~2020년 국가환경보호전략, 올해 환경오염확대 방지 등을 추진」, 2020. 2. 13.
14) 『조선중앙통신』, 「김광진 국토환경보호성 처장 인터뷰」, 2020. 2. 13.

3. 지방경제 활성화 정책¹⁵⁾

김정은 시기 북한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실현하고, 주민생활의 실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방경제발전에 힘을 쏟고 있다. 북한은 2012년 1월 22일에 개최된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부터 “경공업 부문에서 인민들의 기호에 맞으며 인민들이 인정하는 질 좋은 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고, 지방공업 발전에 결정적 전환”을 일으킬 것을 강조하면서 지방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¹⁶⁾ 특히 2013년에는 전국 단위의 경공업 대회를 개최하여 생산품의 공급 부족과 낮은 품질, 원료·자재의 높은 해외 의존도, 노동자의 ‘폐배주의’, ‘수입병’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하였다. 김정은 시기 북한은 집권 초기부터 경공업 발전에 대한 주문을 ‘인민대중제일주의’와 결합하여 체제 안정화에 활용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2021년 1월에 제8차 당대회를 통해 “시, 군은 당정책의 말단집행단위이고 농촌경리와 지방경제를 지도하는 지역적 거점이며 나라의 전반적 발전을 떠받드는 강력한 보루”라고 언급하면서 “시, 군을 거점으로 농촌경리와 지방경제발전, 인민생활향상을 추진”할 것을 강조하였다.¹⁷⁾ 이와 함께 시, 군 강화의 목표는 “모든 시, 군들을 문명부강한 사회주의국가의 전략적 거점으로, 자기 고유의 특색을 가진 발전된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시, 군들에서는 자기의 지역적 특색에 부합되는 발전전략과 전망목표”를 수립하여 연차별로 실행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북한은 2021년 3월에 북한 정권 최초로 ‘제1차 시·군당책임비서 강습회’를 개최하여 “전국의 균형적 동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사회주의 건설의 지역적 거점인 시·군 강화의 초석을 다지고 나라의 전반적 발전을 추동”할 것을 강조하였다.¹⁸⁾ 2022년 6월에는 강원도 철원군과 인접한 접경지역인 북 강원도 김화군에 식료품공장, 옷공장, 일용품공장, 종이공장 등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을 진행하는 등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¹⁹⁾

한편, 북한은 2021년 6월 UN에 제출한 자발적국별리뷰(VNR)에서 목표 10번 ‘국가 주체로서 인민대중의 권리 및 역할 보장’ 관련 추진 현황에 대해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활발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DPRK, 2021, p.35). 산업, 농업, 공공보건, 교육 및 인프라 분야에서 도농 간 격차가 존재하나, 북한은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에 따라 인민 생활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시와 군을 정치, 경제 및 문화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독자적인 특성을 가진 지역으로 개발하도

15)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해정, 「김정은 시기 북한의 지방경제 활성화 정책 분석과 시사점」, 『KDI 북한경제리뷰』, 2022년 12월호, pp.49-57을 참고하라.

16) 『조선중앙통신』(2012. 1. 22); 통일부, 『월간 북한동향』 2012년 1월호, p.37에서 재인용.

17) 『노동신문』(2021. 1. 9) 참고.

18) 통일부, 『월간 북한동향』 2021년 3월호, pp.5-10.

19) 『노동신문』(2022. 6. 23); 통일부, 『월간 북한동향』 2022년 6월호, p.22에서 재인용.

록 지원하고 있으며, 농촌에 대한 국가 지원 역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목표 10과 관련한 향후 추진 계획에서 도농격차 감소를 위해 국가는 농촌 지원을 강화하고, 도시의 공장과 기업소는 농촌의 협동농장과 작업반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에너지의 공급을 보장하고, 환경·자재·연료 공급을 개선하는 한편, 농업생산 증대를 통해 농촌인구의 생활수준과 농촌경제의 물질·기술적 기초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실효성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정은 시가 북한은 지방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2년에 「지방예산법」, 2013년에 「경제개발구법」, 2021년에 「시군발전법」 등의 법률을 신규 제정하였다. 이러한 법률의 신규 제정은 지방 행정기관 및 기업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지방분권화를 도모하고 이를 법제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III. 국정과제와 연계한 남북교류협력 과제

1. 남북간 상호 개방과 소통

국정과제 94번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에는 언론·출판 교류, 미디어 콘텐츠 분야 교류 등 다방면의 남북 상호 소통·교류 추진 및 인적교류 확대가 포함되어 있다.²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원격교육, 화상회의 등 비대면 방식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채널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화상회의 및 온라인 무역박람회 등에도 적극적인 모습이다.

2023년 통일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통일부는 제1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9. 27 예정)을 개최하고, 추석 계기 이산가족의 염원을 구현한 ‘고향방문 메타버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산가족 화상상봉시스템 구축을 시작으로 비대면 방식을 활용한 남북교류 재개를 검토할 수 있다. 2020년 6월에 폭파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비대면 방식으로 복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양문수·이춘근·이석기, 2021, p.95). 이와 함께 국정과제 93번 ‘북한 비핵화 추진’에 포함되어 있는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역시 비대면 방식을 함께 논의할 수 있다. 남북간 대화와 교류가 재개될 경우, 다양한 방식과 내용으로 상호 개방과 소통을 진전시켜

20)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2022년 5월, p.160.

나갈 수 있다. 원격교육방식을 활용하여 중앙은 물론, 시·군 단위의 통계 담당자들의 통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협력도 검토 가능하다. 객관적 통계 구축과 이에 기초한 경제사회 발전 및 관련 계획 수립 등은 북한이 자발적국별리뷰(VNR)를 통해 협력 수요를 밝힌 바 있다(DPRK, 2021, p.48). 이와 함께, 북한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경제특구 법제, 회계와 세금 분야 법제를 중심으로 비대면 국제 세미나 또는 학술회의 개최도 추진 가능하다(이해정, 2022, p.257). 북한과의 접촉 및 소통 채널이 다양화될 경우, 개성 선죽교나 박연폭포, 외금강·내금강·해금강 등 개성 관광 또는 금강산 관광 코스를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로 시각화한 실감형 콘텐츠를 남북이 협력하여 제작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2.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

국정과제 94번에는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세먼지·자연재난 공동 대응 등 환경협력 추진 및 산림·농업·수자원 분야 협력 강화와 접경지역의 그린평화지대화가 명시되어 있다.²¹⁾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북한도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재해재난 대응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및 환경, 보건과 민생 인프라 개선 관련한 ‘그린’ 분야에서의 협력 추진은 국제사회의 공감대 확보에 용이하다. 실제로 2019년 11월과 12월에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가 ‘개풍양묘장 현대화사업’과 ‘만경대어린이종합병원 등에 대한 의료기자재 원료의약품 지원’에 대해 제재 면제 승인을 받은 바 있다.²²⁾ 2020년 5월에 ‘국제푸른나무’는 온실 설치, 파종, 관개, 묘목 도구 및 기계 등 온실농사에 필요한 물품에 대한 제재 면제를 획득한 바 있으며,²³⁾ 동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물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진단 장비의 대북 반출, 경기도가 신청한 태양광 패널을 포함한 스마트 온실 장비 등에 대해서도 제재 면제를 인정받은 바 있다.²⁴⁾

UN은 SDGs 목표 3번 건강과 복지에서 2030년까지 말라리아를 종식시킨다는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2025년까지 25개 국가에서 말라리아를 완전히 퇴치하겠다는 E-2025 계획(E-2025 Initiative)을 수립하여 남한과 북한을 우선퇴치 권고국가에 포함시켰다.²⁵⁾ 한국은 1979년에 WHO로부터 말라리아 퇴치 인증을 받았으나, 1993년에

21)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2022년 5월, p.160.

22) 『통일뉴스』, 「제재면제 승인 계기로 남북협력 물꼬트길 바래」(2020. 1. 25)(<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113>, 검색일: 2023. 5. 16).

23) 『연합뉴스』, 「NGO 국제푸른나무, 유엔서 대북지원 제재 면제 승인받아」(2020. 5. 5)(<https://www.yna.co.kr/view/AKR20200505034800504>, 검색일: 2023. 5. 16).

24) VOA, 「유엔, 경기도 대북지원사업 제재 면제 승인...온실 건설 통한 취약계층 영양 개선」(2020. 8. 12)(<https://www.voakorea.com/korea/korea-economy/un-soko-sanctions-exemption>, 검색일: 2023. 5. 16).

25) WHO, "World Malaria Day: WHO launches effort to stamp out malaria in 25 more countries by 2025(2021. 4. 21)(<https://www.who.int/news/item/21-04-2021-world-malaria-day-who-launches-effort-to-stamp-out-malaria-in-25-more-countries-by-2>

휴전선 인근에서 말라리아가 재출현한 이후, 현재는 말라리아 환자의 90%가 인천, 경기, 강원 등 휴전선 접경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²⁶⁾ 말라리아와 같은 인간감염병 뿐만 아니라, 소나무재선충 등 산림병해충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과 같은 월경성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는 남북의 정보 교류 및 공동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강민조·임용호·정유진, 2022, p.140). 이를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교류 시 상술한 비대면 화상회의 등의 방식도 검토 가능하다.

또한 DMZ의 산림복원 방안과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남북 공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남북 공동의 DMZ 유네스코 접경 생물권 보전지역(Transboundary Biosphere Reserve: TBR) 지정 추진을 위한 남북 간 논의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²⁷⁾ 2018년의 국내 ‘순천’과 북한 ‘금강산’ 생물권보전지역 동시 지정을 계기로, UNESCO 국제조정이사회는 유네스코를 통한 남북협력 확대를 당부한 바 있다.²⁸⁾ 1982년에 지정된 설악산 생물권 보전지역과 2019년에 지정된 강원생태평화 생물권 보전지역, 연천임진강 생물권 보전지역을 북한의 금강산 생물권 보전지역과 연계하여 접경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남북협력을 고민할 수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으로 주요 농작물의 주산지가 남부지방에서 충북 및 강원 지역으로 북상하고 있어 일부 강원도 산간을 제외한 남한 대부분의 지역은 2060년대부터 아열대 기후로 변경될 것으로 예측된다.²⁹⁾ 사과, 복숭아, 포도, 인삼 등의 재배 가능지가 줄어들고, 감귤, 단감 등의 재배 한계선이 상승하여 재배 가능지가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기후변화로 인해 한반도의 농업생산성 저하 및 식량 안보 위협이 초래되지 않도록 남북이 서로 협업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접경지역인 강원도와 경기도를 중심으로 우량품종개발 및 토종품종 보존 등에 관한 공동 연구개발, 농업협력특구를 조성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북한 고랭지 지역에 적합한 고랭지 채소 품종을 선발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파종 및 재배 기술 지원 등을 통해 신선 채소의 안정적 생산 기지 개발을 검토해 볼 수 있다(최용호 외, 2022, p.102).

025, 검색일: 2023. 5. 16).

26)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2023년을 말라리아 재퇴치의 출발점으로!」(2023. 4. 25)(<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4476&pWise=mSub&pWiseSub=C2#pressRelease>, 검색일: 2023. 5. 16).

27) 유네스코 접경 생물권 보전지역(Transboundary Biosphere Reserve: TBR)은 2023년 현재 전 세계 22개가 지정되어 있다(<https://en.unesco.org/biosphere/wnbr>, 검색일: 2023. 5. 16).

28) 외교부, 「순천과 금강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신규 지정」, 2018. 7. 30(<https://www.mofa.go.kr/viewer/skin/doc.html?fn=20180725063702054.hwp&rs=/viewer/result/202305>, 검색일: 2023. 5. 17).

29) 통계청 보도자료, 「기후변화에 따른 주요농산물 주산지 이동현황」, 2018. 4. 10, p.4.

3. 국토의 균형 발전

국정목표 6번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수도권 쏠림-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어 내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³⁰⁾ 북한 역시 도농격차 감소 및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민을 정책과 제도에 반영하고 있다.

지난 2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화경제특구법」)을 의결하였다.³¹⁾ 해당 법률안은 평화경제특구 구성을 계기로 지난 7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과 양보를 해온 접경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한 인접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다(최용훈, 2020, p.2). 「평화경제특구법」은 지난 17대 국회부터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20여 년간 논의만 진행되고 있어 실질적 진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시 이를 계기로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북한 지역 교육기관이나 연구소 등과의 교류를 통해 남북한 지역별 산업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기술지원 을 실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김정은 시대 북한이 의욕적으로 추진하였으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로 인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경제개발구 개발과 관련한 제도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IV. 결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 지역 간 격차 해소는 남북뿐 아니라 전 세계가 2030년까지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하는 과제이다. 특히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개념이 더욱 강조되고 있어 향후 남북교류협력 재개 시 비전통 안보개념인 인간안보에 기초한 접근 역시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정과제 94번에 근거한 남북간 상호 개방과 소통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시작으로 비대면 방식의 남북교류를 재개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비대면 방식으로 복원하는 한편, 남북한의 협력 수요를 고려하여 통계 및 법제 관련

30)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2022년 5월, p.17.

31) 매일경제, 「'가자! 평화경제특구'... 강원·인천·경기 접경지역 발전 발판」, 2023. 2. 17(<https://www.mk.co.kr/news/society/10649364>, 검색일: 2023. 5. 8).

역량 강화 협력과 함께 VR 방식의 관광 협력 등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국정과제 94번에 포함된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을 위한 구체적 고민도 필요하다. 말라리아와 같은 인간감염병 뿐만 아니라, 산림병해충과 가축전염병과 같은 월경성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남북이 정보를 교류하고 공동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자연재난·월경성 감염병 등에 대한 대응은 생태·환경적으로 연결된 한반도 내에서 일방의 노력만으로 해결 가능한 과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남북간 논의가 진전될 경우 DMZ의 산림복원 방안과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남북 공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남북 공동의 DMZ 유네스코 접경 생물권 보전지역(Transboundary Biosphere Reserve: TBR) 지정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나아가 기후변화로 인해 한반도의 농업생산성 저하 및 식량 안보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남북이 서로 협업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정목표 6번을 실현하기 위해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을 마무리하고, 동법 제정을 계기로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남북한 지역별 산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 협력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